

# 인구정책·발전전략 수립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

## I. 출장개요

### □ 개 요

- 목 적 : 인구정책 선진국 방문 및 논의를 통한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 모색 및 道 발전전략 수립 강화
- 기 간 : '18. 3. 1(목) ~ 3. 10(토) / 8박 10일
- 방문국가 : 덴마크(코펜하겐), 노르웨이(베르겐),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 출 장 자 : 이정훈(연구기획본부장)  
\*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 등 3인 동행

### □ 주요내용

- 북유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의 성공 요인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정책에 대한 행정경험 공유 및 우수제도 도입 검토
  - 양성평등에 기반한 육아휴직제도(아빠 의무 육아휴직제도, 여성 근로자의 법정 육아휴직 보장 및 임금보전 정책), 1세 미만 활용 가능 강력한 보육시스템 구축, 유연근로제 강화 등
- 북유럽 저출산 극복 경험에 기반한 道 인구정책 방향 모색
  - 여성, 아동, 복지, 교육, 주거, 노동, 고령사회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인구정책 추진
  - 양적인 출산정책이 아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성공적인 SIB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 및 협력방안 모색
  - 성과목표가 분명한 정부정책 분야에 대한 SIB 확대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가능
  - 다만, 중간운영기관(민간)의 자생적 역할 수행과 사회공헌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문제 등은 해결 필요

## II. 주요일정

일시	국가(지역)	주요내용	비고
3.1(목)	덴마크 (코펜하겐)	- 이동(인천 → 헬싱키 경유 → 덴마크)	
3.2(금)	덴마크 (코펜하겐)	- 덴마크 일·가정 양립 등 인구정책 논의 (코펜하겐시청 방문)	
3.3(토)	노르웨이 (베르겐)	- 이동(덴마크 → 노르웨이)	
3.4(일)	노르웨이 (베르겐)	- 역사박물관 및 재래시장 현장견학	
3.5(월)	노르웨이 (베르겐)/ 스웨덴 (스톡홀름)	- 노르웨이 일·가정 양립 등 인구정책 논의 (베르겐시청 방문) - 이동(노르웨이 → 스웨덴)	
3.6(화)	스웨덴 (스톡홀름)	- 스웨덴 일·가정 양립 등 인구정책 논의 (스톡홀름시청 방문)	
3.7(수)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 인구학적 관점의 스웨덴 미래연구 논의 (스웨덴 미래연구소 방문) - 이동(스웨덴 → 핀란드)	
3.8(목)	핀란드 (헬싱키)	- SIB 운영사례에 대한 진행상황 상호 공유 및 양국 간 SIB분야 협력방안 논의 (SITRA 방문)	
3.9(금) ~ 3.10(토)	핀란드 (헬싱키)/ 인천	- 귀국(핀란드 → 인천)	

### Ⅲ. 기관별 세부 활동내용

#### □ 덴마크 코페하겐시청 방문

○ 일시/장소 : '18. 3. 2(금) 10:00 ~ 12:00 / 코페하겐시청

○ 면 담 자 : Frank Hedegaard(사회분야 부서장)

Bo Asmus Kjeldgaard(아동분야 부서장)

○ 주요내용

- 덴마크 보육, 교육 등 일·가정 양립 기반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한 소개
- 덴마크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토론

○ 방문결과 요약

- 덴마크의 경우 개인별 조세부담(평균 50% 내외)에 기반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양육지원, 노인돌봄 등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강화와 일·가정의 양립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합계출산율 1.7명 / '15년 기준)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교육부(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관할하에 데이케어 센터(Daycare Centre)를 통한 가정보육, 유아원, 유치원 등에서 유아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 ※ 보육시설 : 오전 7 ~ 오후 5시까지 운영, 야간보육시설 별도 시별 1~2개소 운영
- 출산장려정책으로 18주 모성휴가, 2주 부성휴가, 출산 후 48주까지 부모에게 각자 32주씩 부모휴가 등 강력한 유급휴가제도 운영으로 덴마크의 경우에도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덴마크의 경우도 젊은 층의 신체적 변화로 가임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개인의 웰빙 추구 및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출산률 저하의 잠재요인이 있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코펜하겐은 매월 1,000명이 유입되어 새 주택과 유치원이 필요하며, 생활비 부담이 높고 젊은 층은 좋은 차 등 소비성향이 높아 아동 부양에 부담을 느끼는 것임
- 코펜하겐 시는 Livable City를 목표로 기후변화 적응, 좋은 이웃 (good neighborhood), 투명성, 신뢰를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이 편하게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등 잘 작동되는 공공부문이 매우 중요함
- 공공부문의 작동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동일한 규모의 지출을 유지하여 변치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동예산 배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변화시킬 때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함
- 자동예산배정시스템이란 아동, 노인 등 각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항목과 수준, 관리비용을 사전에 결정하여 매년 특별한 정치적 결단이 없는 한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아동당 예산책정의 틀은 관리비용+기본적 비용+사회 문제 해결비용+언어교육 등 특별한 추가비용 등 항목을 정해놓고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것임
- 노인의 경우는 음식+간호+개인지원 등의 항목이 중요함
- 이렇게 케어서비스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것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덴마크를 포함한 노르딕 복지모델은 완전한 지방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복지국가임
- 덴마크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출산촉진 캠페인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며, 전체 시스템에서 아이와 부모에 대한 케어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함

- 출산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가율을 높이면서 양성평등의 진전을 통해 여성이 가정에 대해 갖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서서히 남자가 요리, 쇼핑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도 남자는 직장에 매이는 경우가 많아 가사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높은 실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중요함

## □ 노르웨이 베르겐시청 방문

○ 일시/장소 : '18. 3. 5(월) 10:00 ~ 12:00 / 베르겐시청

○ 면 담 자 : Trond Helgesen(아동 교육업무 담당자)

○ 주요내용

- 노르웨이 보육, 교육 등 일·가정 양립 기반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한 소개
- 노르웨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토론

○ 방문결과 요약

- 노르웨이의 경우 모든 아동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바탕으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보장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합계 출산율 1.7명 / '15년 기준)
- 노르웨이는 복지 선진국이자,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 1위('15년 NGO 세이브더칠드런 발표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배려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음
- 특히나, 출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무료이고 출산 후 퇴원시에도 지역 보건소에서 아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 예방접종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엄마들의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연결하고 있음
- 특히나 1999년대부터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린유치원(Apen Barnehave) 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육아와 엄마들의 산후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고

있음

※ 열린유치원 : 사전등록 불필요, 이용시간 자율,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취학전 아동이라면 누구나 부모와 함께 입장 가능

- 노르웨이의 경우, 당초 영유아 보육업무를 아동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에서 담당하다가 초중고 교육과 어린이 보육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2006년부터 교육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여 통합 운영중임
-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중이며('17년 국공립:민간=50%:50%), 국공립, 민간 상관 없이 보육료 상한액(약 300천원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아울러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5세 모든 아동의 유치원 등원을 국가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수준과 가정 환경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1~5세 아동 유치원 등원율 : ('02년) 65.9% → ('17년) 91%

- 특이할 점은, 세계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Daddy's Quota)를 1993년 도입하여 부모 육아휴직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00% 급여를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총 49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10주는 반드시 아빠가 휴직하도록 하고 있음
- 최초 제도 도입 시에는 남성 의무 휴직기간이 4주였으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으로 10주로 확대되었으며, '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17년 기준 97%에 달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출산, 보육 등의 걱정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고용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5%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중 1위인 상황임
- 노르웨이의 80% 이상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젊은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는 엄마들이 시간제 정규직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도 있으나, 엄마와 아이를 배려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잘 갖추어진 지원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음

- 노르웨이의 출산률이 늘 안정된 이유는 아이키우기 좋은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공공어린이집, 육아휴직, 10년 의무교육, 저렴한 대학등록금, 유학생 유입,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있지만 사교육이 없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음



## □ 스웨덴 스톡홀름시청 방문

○ 일시/장소 : '18. 3. 6(화) 10:00 ~ 12:00 / 스톡홀름시청

○ 면 담 자 : Anna Ulevson(양성평등 업무 부서장)

○ 주요내용

- 경기도 및 道 인구정책 소개(미래전략담당관)
- 스웨덴 보육, 교육 등 일·가정 양립 기반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한 소개
- 스웨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토론

○ 방문결과 요약

- 스웨덴의 경우 강력한 보육제도 시행, 일·가정 양립에 기반한 양성평등 강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합계출산율 2.1명 / '17년 기준)
-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2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의 경우 의무적으로 3개월의 육아휴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음
- 특히나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과 일원화 돼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예정 60일 전부터 480일간 휴가를 쓸 수 있고 쌍둥이를 낳으면 180일의



휴가가 추가하고 소득 보전은 월평균 소득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12세 이하의 아이가 아프면 1년에 60일 한도로 120일의 간병휴가 사용이 가능함(간병휴가시 월평균 소득의 77% 지급)

- 또한, 아이를 출산하면 16세까지 매달 약 150천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6세 이후에는 학업보조금으로 이름을 바꾸어 20세까지 지급
- 스웨덴은 양성평등을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 요소로 보고, 정부차원에서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 인구의 유지와 관련해서도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진정한 양성평등 없이는 여성의 육아부담과 사회적 유리천정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구정책에도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임
- 양성평등의 진전을 위해서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 남녀임금 격차 해소(현재 능력급제도에 의해 남녀 임금격차 12%, 동일잡의 경우 5% 격차 존재), 여성이 50% 잡에서 100% 잡으로 이동 장려, 가사노동 배분, 여성리더 발굴 등을 촉진하고 있음
- 또 스웨덴의 경우 '삼부'라는 동거를 사실혼의 한 형태로 인정하면서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혼인<sup>1)</sup>과 출산의 부담이 낮다는 점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보임.



1) 한국의 경우 며느리, 특히 만며느리가 시부모 봉양과 함께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여성들이 명절을 전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명절증후군'과 명절 후 이혼률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이렇게 여성에게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상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혼인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스웨덴 미래연구소 방문

○ 일시/장소 : '18. 3. 7(수) 10:00 ~ 12:00 / 미래연구소

○ 면 답 자 : Martin Kolk(미래연구소 연구원, 스톡홀름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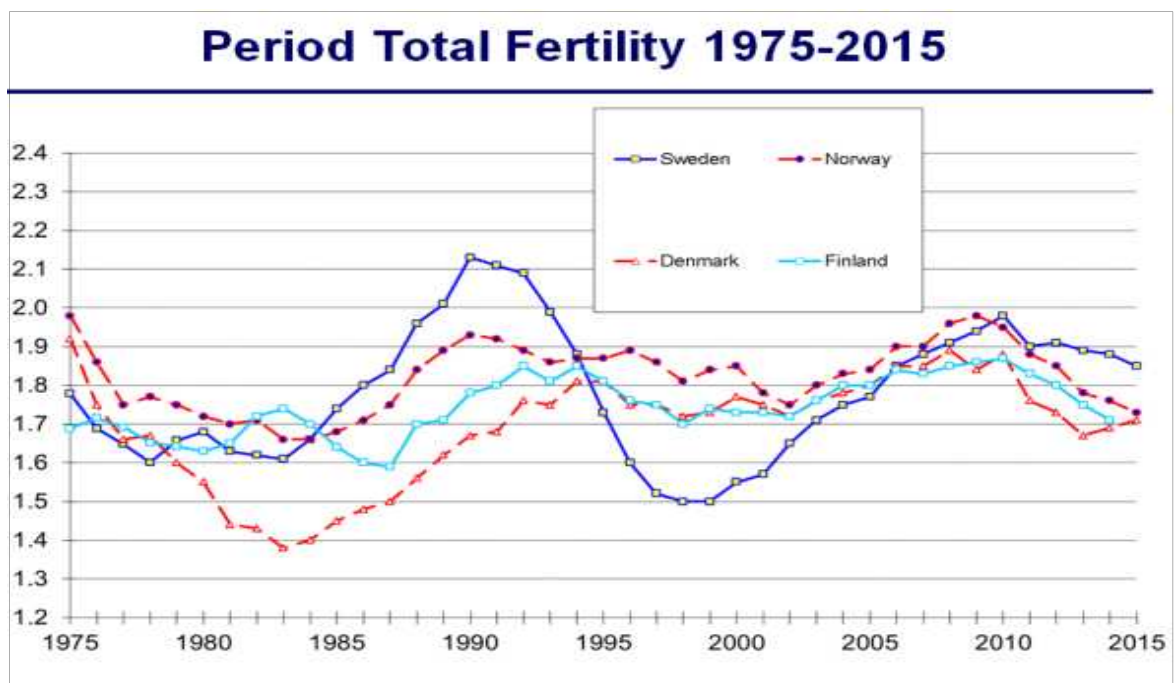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인구통계학에 기반한 스웨덴의 중·장기 미래연구에 대한 소개
- 스웨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구정책 전반 및 스웨덴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상호 토론

○ 방문결과 요약

- 북유럽 4개국의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모델은 양성평등에 기반을 둔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남성과 여성의 노동참여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상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지원이 핵심적인 사항임

〈북유럽 4개국 합계 출산율(197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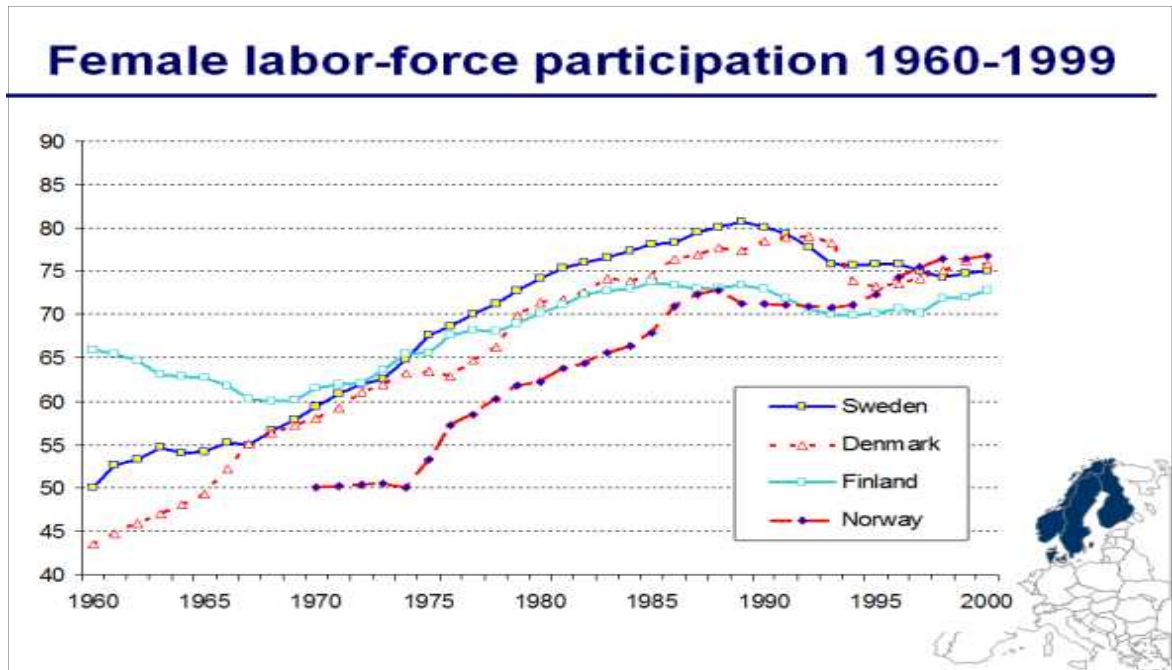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15년) : 스웨덴 1.9('17년 2.1), 노르웨이 1.7, 덴마크 1.7, 핀란드 1.7 / 대한민국 1.05 ('17년 기준) / OECD 평균 1.68

- 남성 노동 중심의 사회분위기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사회적으로 보장

되지 않는 시스템 하에서는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

〈북유럽 4개국 여성 노동 참여율(1960~1999)〉



※ 북유럽 4개국 모두 75% 내외 유지 / 대한민국 52.7%('17년 통계청) / OECD 평균 63.6%('16년)

- 또한, 각종 보조금 정책보다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게 더욱 중요한 사항임
- ※ 인프라 예시 : 맘 놓고 일과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무상보육시스템, 양성평등에 기반한 부부간 가사·육아 분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 보전,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불필요 기반 마련 등
- 또한, 각종 보조금 정책보다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게 더욱 중요한 사항임
- 즉, 스웨덴의 경험에서 출산률 증대의 제1요인은 여성의 노동참여 증대이며, 제2요인은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임. 여성의 노동참여를 통해 커플이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출산률을 유지하는 것이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양육에 어려움이 적기 때문임. 여성은 아이와 일을 동시에 원한다는 사실을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스웨덴 등 북유럽의 인구 사회정책에서 최대 정책현안은 이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임. 많은 국민들은 이민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개방적 사고를 토대로 이민이 사

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스웨덴은 복지국가이지만 혁신과 창업 등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음. 최근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을 용인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20% 수준에서 유지하는 등이 그 예임. 혁신을 위해서는 자국민만으로 부족해서 외국의 두뇌 유치에도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스톡홀름 북서쪽의 혁신클러스터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스웨덴 대표기업 에릭슨을 비롯하여 인텔, MS, 애플, IBM, 지멘스, 화웨이 등 글로벌기업과 스웨덴컴퓨터과학연구소(SICS), IT연구소(SITIAB) 등 국책연구소와 민간연구소, 스웨덴 왕립대학과 스톡홀름대학교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 스웨덴도 기업과 정부의 상생관계,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저변에는 튼튼한 경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줌. 실제로 스웨덴에서 1995-2000년 사이 경제위기 속에서 출산률 급락을 경험한 바 있음. 1990년 2.1이던 출산률이 1997년에 1.5까지 낮아졌고, 다시 복지개혁과 경기회복을 통해서 2010년 경부터 2.0 수준을 회복함. 이는 실업과 소득 저하가 출산률 저하와 직결된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예임



## □ 핀란드 SITRA(SIB 운영기관) 방문

○ 일시/장소 : '18. 3. 8(목) 14:00 ~ 16:00 / SITRA

○ 면 담 자 : Sari Rautio(부서장), Anna Tonteri(업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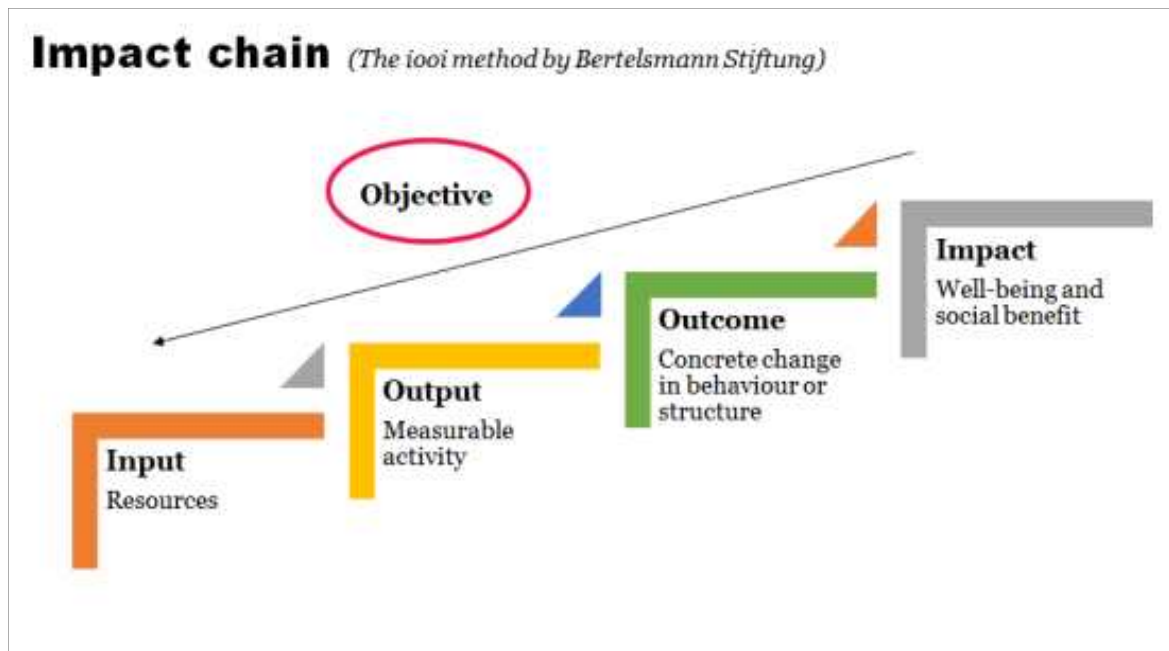
○ 주요내용

- 경기도 및 道 SIB사업 소개(미래전략담당관)

- SITRA 기관 소개 및 SITRA에서 운영 중인 SIB사업 소개
- 양국 간 SIB 운영사례에 대한 진행상황 상호 공유 및 토론, 양국 간 SIB분야 협력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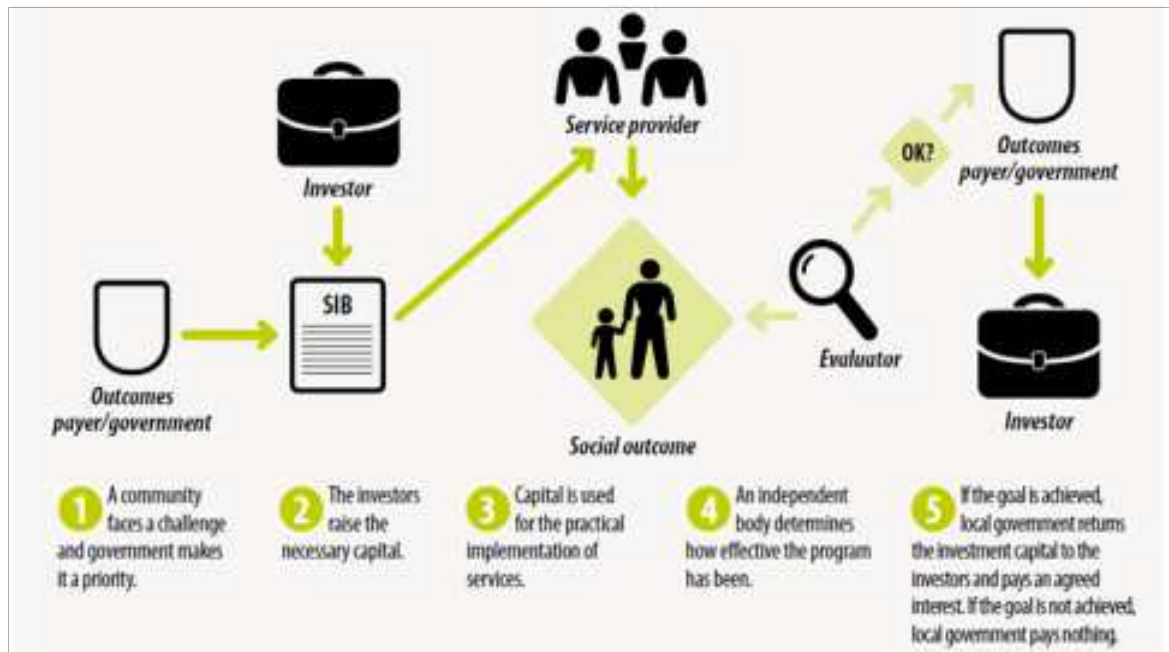
#### ○ 방문결과 요약

- 우선 SITRA(국가연구개발기금)는 핀란드 국회에서 설립한 독립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금 투자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 정부정책 중 성과목표가 분명하고,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은 SIB 방식으로 시행 시 성과목표가 달성된 정책에만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만큼, 예산의 효율적 활용(세금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식임
- 또한 SIB 사업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와 성과를 예측한 후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효율적인 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음



- SIB사업은 SIB 중간운영기관(핀란드의 경우 SITRA)에서 정부정책 중 SIB 적용이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여 구매자인 정부 부처와 협상을 통해 성과기준을 정하고, 이후 투자자 모집과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구매자인 정부 부처에서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목표가 달성되면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임

〈핀란드 SIB사업 추진체계〉



- 핀란드의 SIB사업은 현재 2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3개의 추가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음
  - ※ 핀란드 SIB : ① Occupational Well-Being, ② Fast employment and integration of immigrants(Koto-SIB)
- 최근인 2017년 SITRA에서 중간운영기관으로 시작한 Koto-SIB의 경우 난민과 이민자들의 빠른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직무역량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 ※ Koto-SIB : (대상자) 3,000명의 난민과 이민자중 실업자, (투자자금) €10M, (투자자) The European Investment Fund, (성과기준) 전체 대상자의 40% 기준, (구매자) 핀란드 경제고용부(정부부처)
- Koto-SIB사업은 이민자들의 신속한 취업을 통해 정부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민자들보다 높은 소득세 수입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비용(실업급여 등)을 감소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설계됨



## SIB II: Fast employment and integration of immigrants (Koto-S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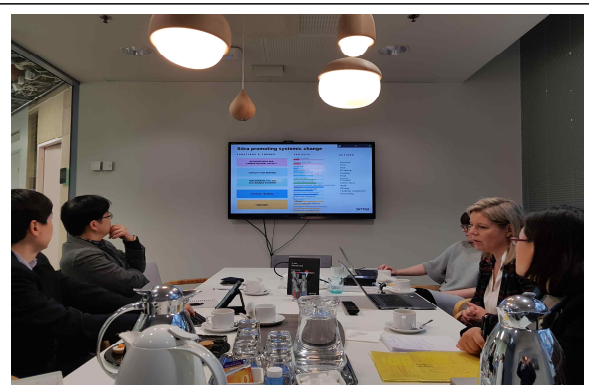
<b>Objectiv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eed up employment of immigrants, pilot new models of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combine education and work in a flexible way</li> </ul>
<b>Purchase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li> </ul>
<b>Status; has started officially in the beginning of 201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pique as a Fund/Project Manager is especially in charge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lanning and managing the project</li> <li>Building up the financial instrument = fund (limited partnership)</li> <li>Fund raising and managing the fund</li> <li>Organising according to the impact goals of the project education and employment activities of immigrants in co-operation with different service providers</li> <li>Follow up, interim reporting and the final reporting</li> </ul> </li> </ul>

※ Koto-SIB : (대상자) 3,000명의 난민과 이민자중 실업자, (투자자금) €10M, (투자자) The European Investment Fund, (성과기준) 전체 대상자의 40% 기준, (구매자) 핀란드 경제고용부(정부부처)

- 현재 SITRA는 공공기관으로 SIB사업의 중간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 SIB사업의 중간운영기관의 인건비 등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사회공헌 개념을 바탕으로 한 투자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투자원금 모집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적 기금 마련 등 검토 필요

※ 핀란드의 경우에는 SIB 투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공적기금은 없는 상황임

- 향후, 핀란드 SITRA의 경우 SIB 분야의 전문기관인 만큼 양국간 SIB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8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18년 인구 정책 국제포럼 개최시 SIB사업을 메인 주제로 선정 검토하고, SITRA 초청 추진 검토





## IV. 총평 및 향후계획

### □ 총 평

- 대한민국 및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한다는 목표하에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낮은 상황임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 가족에 대한 일부 지원 강화가 된 것 이외에도 노동시장, 주거, 보육환경, 교육환경 그리고 양성평등 관점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 제고 한계 발생
- 따라서, 여성, 아동, 복지, 교육, 주거, 노동, 고령사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혁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양적인 출산정책이 아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으로, 각 개인의 소득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추진
  - 양성평등에 기반한 남성의 육아참여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한국의 경우 양성평등, 육아제도 등 복지시스템 이외에 노동시장과 직업에 관한 사회적 관념,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다름. 이에 따라 사교육 부담이 극도로 높고 및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이 크며, 여성들의 가족 및 결혼제도에 대한 부담이 결혼과 출산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
  - 즉, 북유럽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노동시장, 직업, 교육문제,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사교육문제 해결, 공교육 정상화 및 대학교육의 실용적 개혁, 실용적인 직업관, 가족 및 결혼제도의 다양화(미혼모, 동거자에 대한 편견 극복 등)의 아젠더를 제시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근본적인 사회패러다임의 전환과

전 분야에 걸친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며, 국가주도 및 성장 중심의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개인들이 출산과 가족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 향후계획

- 道 인구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에 기반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범 도정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향함
  - 단기적으로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계획, 인구정책 영향분석,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에 북유럽 사례 도입 검토
    - ※ SIB 중간운영기관인 SITRA의 道 ‘18년 인구정책 국제포럼 초청 추진 검토
  -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제 수립시 북유럽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
  - 범경기도 차원의 사회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본 출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 중장기적으로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